

이 자료는 2005.11.9(수요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資 料	생 산 일	2005년 11월 9일
		생산부서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담당과장	김용범(2110-2420)
		담당자	성창훈(2110-2422)

題目 :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과제
<11.8일,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종료>

□ 서민경제의 안정과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의 마무리를 위해 추진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3.23일 발표)을 통해

○ 05.41~11.8일간 131,777명(대상자의 33%)의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채무재조정을 신청

- 기초수급자는 대상자의 58%가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는 각각 20%, 17%를 기록

* 지난해 배드뱅크의 신청율이 9.7%(총 6개월간 대상자 180만명중 17.4만명 신청)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양호한 성과

*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재조정 신청(잠정, 명)

	기초 수급자	청년층				영세 자영업자	합계
		학자금	군복무	기타	소계		
신청자수(A)	87,164	14,433	3,322	2,244	19,899	24,714	131,777
대상자수(B)	15만명	4.7만명	3.1만명	2.1만명	10만명	15만명	40만명
신청율(A/B)	58%	31%	11%	11%	20%	17%	33%

○ 금융권 공동추진 프로그램(희망모아)을 통해서도 143,726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5.16~11.7일)

□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더불어
기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됨

- 05.1~10월중 개별금융기관 지원,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361,104명의 신용회복을 지원

<민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채무재조정 실적(명)>

	05.1/4	2/4	7월	8월	9월	10월	1~10월
개별금융기관 지원	40,461	30,718	8,675	8,075	-	-	87,929
개인워크아웃	76,692	58,139	18,404	19,942	13,837	12,220	209,413
LG-산은 공동추심	20,802	21,960	6,617	6,632	1,763	5,988	63,762
합계	137,955	110,817	33,696	34,649	15,600	18,208	361,104

- 05.1~9월중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 이용자(57,787명)는
04년 연간실적(21,387명)의 거의 3배에 이르는 등 빠르게 증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실적(명)>

	01년	02년	03년	04년	05.1~9월
개인회생(A)	-	-	-	9,070	34,031
개인파산(B)	673	1,335	3,856	12,317	23,756
신청합계(A+B)	672	1,335	3,856	21,387	57,787

□ 이러한 성공적인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의 추진결과,

- 05.10월말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14만명으로 04.12월말
(361만명)에 비해 47만명 감소
-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민간소비도 04.3/4분기
이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금년 3/4분기에는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4.0%를 기록하는 등 정상화

<GDP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비교(%)>

	04.1/4	2/4	3/4	4/4	05.1/4	2/4	3/4
GDP(A)	5.3	5.5	4.7	3.3	2.7	3.3	4.4
민간소비(B)	△1.3	△0.5	△0.8	0.6	1.4	2.8	4.0
차이(A-B)	6.6	6.0	5.5	2.7	1.3	0.5	0.4

□ 앞으로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가 더 이상 우리경제의 부담의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①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 회생·파산제도 등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는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군복무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설화(11.18일 예정)

* 복무기간동안 상환유예하고, 제대후에도 최장 2년간 추가 유예

② 그동안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을 평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06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③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의 교훈을 바탕으로 백서 발간
(금년말~내년초) 추진

④ 신복위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관리교육 강화

⑤ 금융기관들은 선진적인 개인 신용위험관리체제를 구축

⑥ 정부도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신용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

財 政 經 濟 部

政 策 弘 報 管 理 室 長